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1.183

JCCT 2024-1-22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Defense Cost Sharing between Korea and the U.S.

민용기*, 신성균**, 박용준***

Yonggi Min* Sunggyun Shin** Yongjoon Park***

요약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방위비분담금, 방위비분담금 결정요인, 한미동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termining factors (economy, security, domestic politics, administrat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at affect the ROK-US defense cost sharing decision. Through this, we will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defense cost sharing decision proces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defense cost sharing calculation and execution. The scope of the study is ROK-US defense cost sharing from 1991 to 2021. The data used in the empirical analysis were various secondary data such a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government statistical data, SIPRI, and media reports. As an empirical analysis metho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ime series was used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n autoregressive model. As a result of empirical research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 derived the following results. It was analyzed that the size of Korea's economy, that is, GDP, the previous year's defense cost share, and the number of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decision on defense cost sharing. This indicates that Korea's economic growth is a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increase in defense cost sharing, and that the gradual increase in the budget and the negotiation method of the Special Agreement (SMA) for cost sharing of stationing US troops in Korea play an important role. On the other hand, the political tendencies of the ruling party,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and China's defense budget were found to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cision to share defense costs.

Key words : defense cost sharing, factors determining defense cost sharing, the Korea-U.S. alliance

*정회원, 육군훈련소 23연대 군수장교 (제1저자)

**정회원, 육군3사관학교 법정학과 강사 (제2저자)

***정회원, 육군3사관학교 법정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5, 2023 / Revised: October 22,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pyjlove16@gmail.com

Dept. of Faculty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Korea Army Academy at Youngcheon, Korea

I. 서론

한미동맹은 1954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평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최초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포괄적 동맹으로 변화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에서 나아가 동북아 평화질서에 기여하는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하였다.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상황과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1].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상황과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한미방위수호조약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군사 동맹에서 시작해 현재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포괄적 동맹의 개념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유사시 증원되는 신속억제방안(FDO: Flexible Deterrence Option),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 Time-Phased Force Deployment Data)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부족한 한국군의 정보자산을 보충해 한반도 안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북한에 비해 양적으로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전쟁 수행능력 및 전구차원의 전략계획 수립능력을 향상시키는 군사적 가치를 갖고 있다. 한미동맹은 군사적 가치에서 나아가 튼튼한 안보제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2].

한국의 경제성장, 군사력 성장과 더불어 동맹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1991년부터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문제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협상시마다 분담금 최대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최소한의 부담을 원하는 국내 여론이라는 상충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한국 입장이 다른 양상을 보이며 협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미국의 제정약화와 대한민국의 경제력 신장을 고려해 1,073억 원을 부

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3].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가 안보 상황, 정치적 상황, 경제적 조건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의 실증 분석들은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 요인을 좁게 한정지어,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안보, 경제, 국제정치, 국내정치, 그리고 행정적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예산 편성의 고유한 특성과 협상 과정의 복잡성을 더욱 세밀하게 고려한 점에서 차별화된 연구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식별하고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방위비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들을 철저히 검토한다. 이 검토를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독특한 특성과 동북아 안보 상황이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의 주요 동인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범위는 1991년~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대상이며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분석을 시행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II.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방위비 분담의 개념

방위비 분담은 동맹 관계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국가 간에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을 말한다[4]. 이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의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나누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은 비용 분담(Cost-Sharing), 부담 분담(Burden Sharing), 책임 분담(Responsibility Sharing)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개념은 동맹국의 군대가 다른 동맹국에 주둔하는 비용, 동맹 전체의 안보 강화에 대한 각 국가의 기여, 그리고 군사적 및 비군사적 부담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부담에 대응한다[5].

방위비 분담을 공동의 국익 보호 및 증진 활동에 따른 여러 국가의 부담을 나누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는 비용 부담, 방위 부담, 안보 부담, 국제 공공재 부담 등 네 가지 분류로 이 개념을 세분화했다. 이 분류는 경제적 비용부터 군사적, 비군사적 기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부담을 포함한다[6].

방위비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한 정부 예산 또는 경비를 말한다[7].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이러한 정의에 따라 한미동맹을 통해 달성하려는 안보 이익을 위해 양국 정부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시작하여 약 70년 동안 한국의 방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동맹의 성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이는 방위비 분담금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표1에 보인 바와 같이 처음에는 군사적 지원을 주로 받던 관계에서 이제는 상호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방위비 분담금에도 반영되었다[8].

표 1. 부담 분담의 개념

Table 1. Concept of burden sharing

구분	위협성격	동맹수단	부담성격, 범위	지역적 범위
비용분담	군사적	군사적 수단	군사비, 주둔경비	동맹체제 내
방위분담	군사적	군사적 수단	+ 물적, 인적자원 조직 등	동맹체제 내
안보분담	군사적	군사적 수단	+ 비군사 부담 : 정치, 경제, 의료 등	역내 중심, 역외 포함
국제공공재 부담	군사, 비군사	군사적 수단, 비군사적 수단	군사, 비군사 형태 불문	국제사회 일반

2.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현황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부터 시작되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주로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비용,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주요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9]. 인건비는 주한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급여 및 수당을 포함하며, 연간 세 차례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된다. 군사건설비는 미군의 비전투시설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주로, 탄약고, 업체호 등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에 사용되는 시설물에도 활용되며, 연 2회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미군 측의 사업 선정 후 한국 측이 집행하는 현물 지급 방식을 취한다. 군수지원비는 작전 지속 지원에 필요한 물자지원비를 포함하여 탄약 저장, 관리, 수송, 장비 수리 및 정비 등에 관련된 시설, 용역 및 물자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직접지원뿐만 아니라 1990년 이전부터 시작된 간접지원도 포함한다. 간접지원의 범위는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 면제, 세금 혜택, 주한미군에 의한 공무 피해에 대한 보상, 카추샤 지원 등을 포함한다. 1991년부터 한국은 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냉전 종식 후 변화된 안보 환경,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및 군사력 성장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SOFA(주둔군 지위 협정) 제5조의 예외적 조치로서 SMA(특별조치협정)에 근거한다.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는 1991년 약 1,073억에서 시작하여 2021년에는 1조 1,833억으로 증가했다.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클수록 협상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의 협상 주체는 초기에는 국방부였으나, 6차 협상부터는 외교부가 주도하고 있다.

표 2에 보인바와 같이 각 차례의 협정은 다양한 조건과 기간에 따라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3차 협정은 1996년에 시작되어 3년간 유효했으며, 분담금은 전년 대비 1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경제 상황의 변화는 분담금 규모에 반영되어, 1998년 IMF 사태 때는 분담금을 조정하기도 했다. 4차 협정부터는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일부를 원화로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분담금 인상률은 실질 GDP 변동률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했다. 5차 협정에서는 원화 지급 비중이 증가했고, 6차 협정부터는 분담금 전액을 원화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협정들은 유효 기간, 인상률 산정 방식, 현물지원 체계 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국

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감액되거나 동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표 2. SMA 협상내용
Table 2. Contents of SMA negotiations

협정 차수	협정 년도	분담 금액	내 용
1,2차	1991년	1,073억	• 1995년 총액3억불을 목표로 매년 일정분담금 증액
3차	1996년	2,475억	• 유효기간 : 3년 • 인상률 : 전년도 분담금 기준 10% • IMF로 인한 분담금 규모 조정
4차	1999년	4,408억	• 협정 유효기간 : 3년 • 인상률 : 실질 GDP 변동률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일부 원화지급
5차	2002년	6,135억	• 협정 유효기간 : 3년 • 인상률 : 전년도 분담금의 8.8% + 전전년도 물가지수 • 군사건설비 일부 현물지원으로 전환
6차	2005년	6,804억	• 협정 유효기간 2년, 기간 내 분담금 동결 • 2005년부터 전액 원화 지급
7차	2007년	7,255억	• 협정 유효기간 : 2년 • 인상률 : 물가상승률 반영 •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비율 확대 합의
8차	2009년	7,600억	• 협정 유효기간 : 5년 • 인상률 : 전전년도 비자물가지수 적용, 인상률 상한선 4% 적용 • 군사건설비 전면적 현물전환 내용 추가
9차	2014년	9,200억	• 협정 유효기간 : 5년 • 인상률 : 전전년도 비자물가지수 적용, 인상률 상한선 4% 적용 • 제도개선 내용 - 분담금 배정 사전 조율 강화 - 군사건설 분야 사전 협의체 구축 - 인건비 집행 투명성 제고 - 예산 편성 및 결산 투명성 강화
10차	2019년	1조 389억	• 협정유효기간 : 1년 • 제도개선 내용 - 군사건설 분야 현물지원 체계 강화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개선 - 중장기 제도개선 위한 합동실무단 운영 동맹체제 내
11차	2021년	1조 1,833억	• 협정유효기간 : 6년 • 인상률 :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 제도개선 내용 - 협정 공백 시 인건비 선 지급 규정신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특성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분담금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0]. 표 3에 보인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약 3만 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은 1955년부터 시작되었다. 독일의 분담금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되며, 전 시 지원 관련 항목이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

고 있다. 1990년 통일 이후 독일의 분담금은 NATO 분담금 및 간접지원 위주로 변화했으며, 여러 정부 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분담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맥락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현황과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연구는, 주일미군의 역사와 현재의 운영 체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요구한다. 현재 일본에는 약 5만 2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원은 1945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한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7년간의 미군정 기간을 거쳐,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의해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을 바탕으로 주일미군은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미일동맹이 군사적 협력을 넘어서 정치, 외교, 경제적인 면에서 강화됨을 시사한다. 일본의 방위비 분담은 1987년부터 시작되어, SOFA(주둔군 지위 협정)의 예외적 잠정규약인 SMA(특별조치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분담 방식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되며, 특히 한국과 비교했을 때 SOFA를 통한 직접지원 항목이 더 많은 점이 두드러진다. 일본은 시설개선비 등 5개 항목을 직접지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우와 대비되는 점이다. 일본의 방위비 분담 방식은 한국의 총액 지급 방식과 달리, 소요 항목별로 지급하는 '소요충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 지출이 국내 경제 활동으로 반영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일본은 미군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함께 경비 절감 노력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 있는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1999년 2,756억 엔(약 3조 748억 원)에서 2014년 1,848억 엔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안보 환경의 변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 요구, 추가 군사 시설 및 공동 훈련 부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최근 소폭 상승하였으며, 2021년에는 2,017억 엔으로 협상되었다. 한국, 독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특징을 비교 분석하면, 각국의 분담금 성격과 특징은 분담금에 대한 지원 근거, 분담 내용, 방위분담금 결정 방식, 안보관 및 안보 환경, 국민 여론, 협상 과정에서의 원칙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국가의 방위비 분담금이 어떻게 그들의 안보 정책

및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표 3. 한국, 독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비교내용
 Table 3. Comparison of Korea, Germany, and Japan's defense cost contribution

구분	한국	독일	일본
안보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핵 미사일 위협 미국 핵우산 전시작전권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위협 거의 없음 미국 핵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카쿠열도 분쟁 북핵, 미사일 위협 미국 핵우산 집단지위권 추진
안보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국지적 안보관 통일지향 안보관 제한적 전력증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평화, 안정 세계평화 기여 군축, 군비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대응 안보관 동아시아, 아태지역 안보관 적극적 전력증강
국민 여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찬성 : 공동방위 필요 반대 : SMA 위법성 지적, 과도한 분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대여론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대여론 미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환경에 따른 부담분담 국민여론 고려 현금제공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부담 분담 군축, 군비통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환경에 따른 부담분담 중국대응 부담분담 전력증강 부담분담
결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액 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FA 명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요 총액형 방식
분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FA 직접지원 - 주한미군에 의한 공무피해 보상 SOFA 간접지원 - 시설 및 부지제공 면세, 조세감면 등 특별협정 지원 -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기타 - 카추사(KATUSA)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FA 직접지원 - 임대료 기지이전 비용분담 주둔군부대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SOFA 간접지원 - 토지 및 시설 공여 면세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FA 직접지원 - 시설개선, 건설정비 국유, 사유지 임대료 기지이전 비용 주일미군에 의한 공무피해 보상 복지비용 등 노무비 SOFA 간접지원 - 부지 제공, 면세 혜택 특별협정 지원 - 고용원 인건비 수도, 전기, 가스료 훈련장소 이동, 재배치 경비

3. 방위비 분담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나누어져 있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경제학, 국제정치학, 게임이론, 국내정치학 이론을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의 결정요인 및 정책적 고려 사항을 분석했다[6]. 국내정치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구조의 집권화 정도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11]. 동맹국들의 부담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맹의 필요성과 동맹국의 능

력을 중심으로 분석했다[12]. 한국, 일본, 독일의 부담분담 기여도를 동맹지원의 필요성, 부담분담 목표달성 역량, 국내정치구조를 통해 설명했다[10]. 방위비 분담금이 국제적, 국내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증가 및 미일 방위비 분담금의 감소 현상을 설명했다[8].

실증적 연구에서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을 공급 측면, 수요 측면, 기타 환경 측면으로 구분해 분석했다[13]. 동맹국들의 목표달성 역량, 수혜의 원칙 등을 바탕으로 한미방위비 분담금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3].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했다[14]. 이들 연구는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안보요인과 경제요인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은 안보상황,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규모가 결정되며, 실증분석은 방위비 분담금을 제한적으로 설명하는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여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요인으로 안보, 경제,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 행정적 요인을 포함시켜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자 했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달리 예산의 고유 특성과 협상 절차의 특징을 반영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III.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실증 분석

1.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는 경제적 요인, 안보적 요인, 국내정치적 요인, 행정적 요인,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아래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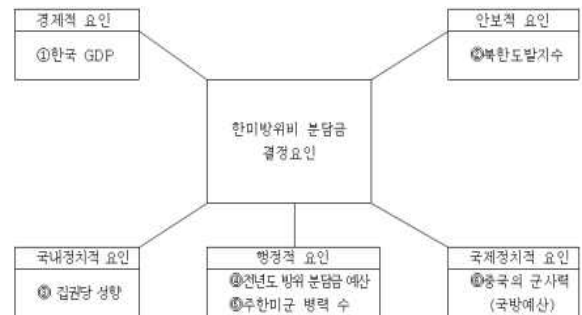


그림 1.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

Figure 1. Determinants of Korea-U.S. Defense Cost Share..

2.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독립변수)

1) 경제적 요인(GDP)

경제적 요인에 관한 변수는 경제력을 대표하는 지표인 한국의 GDP로 측정되었다. 이는 결합물 생산 이론에 근거한 선택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련된 경제이론에는 공공재 이론, 결합생산물 이론, 비군사적 공공재 분담과 대체 관계론 등이 있다[6]. 이러한 이론들은 방위비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재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만, 경제력이 높은 국가가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한다는 공통된 내용을 포함한다.

한미동맹의 안보 이익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무기체계와 역량이 순수공공재 개념으로 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병력 및 무기체계는 공공재의 성격과 더불어 한반도 방위라는 사적재의 특성을 지닌다. 미국 역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자국의 동아시아 정책 목표인 북한의 위협 통제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주도권 유지라는 안보 이익을 추구하며, 이는 사적재의 성격을 가진다[5].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특성은 N-Process가 L-Process에 비해 더 큰 설명력을 가진다고 제시한다. 이는 한미동맹의 안보이익 성격이 순수공공재보다는 결합생산물에 더 적합하다는 분석 결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미동맹의 경제적 요인에 관한 변수 선정과 이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5].

2) 안보적 요인(북한 도발지수)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안보요인으로,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도발지수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한미동맹의 근본적 목표는 외부세력, 특히 북한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무력 도발, 미사일 실험, 핵 실험을 통해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행동은 한반도를 수호하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표와 직결되어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소요는 방위비 분담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표 4에 보인바와 같이 북한의 군사 위협을 측정하는 대리 변수로는 '북한도발지수'가

사용되었다[16]. 이 지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북한의 군사 도발 유형별, 사례별 가중치와 영향력을 분석하여 산정된 것으로, AHP(계층화 분석 절차) 기법을 적용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단순히 군사도발 횟수로 북한의 위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발 유형과 사례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위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표 4. 북한의 도발 유형 및 사례별 가중치 및 영향력
Table 4. Weight and influence by type and cas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계층1	계층2 (유형)	계층 3(실제 사례)		
		사례	가중치	영향력
북한의 도발	지상 (0.299)	포격도발	0.25	10
		DMZ 내 총격, 지뢰도발	0.20	8
		군사분계선 침범	0.18	7
		침투(간첩, 공비)	0.22	9
		DMZ 주변 무력시위	0.15	6
	해상 (0.217)	천안함 피격	0.23	10
		서해교전	0.24	11
		해상 포사격	0.17	7
		NLL 침범	0.17	7
	공중 (0.173)	선박 피랍	0.19	8
		무인기 침범	0.19	7
	핵/미사일 (0.31)	핵 실험	0.35	10
		탄도미사일 실험	0.31	9
		SLBM 실험	0.34	8

3) 국내정치적 요인(집권당 성향)

국내정치적 요인은 집권당의 성향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국내정치 이론 중 국가 자율성 시각(State Autonomy)과 관료 정치 시각(Bureaucratic Politics)이 주요하다[6].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산정과 집행 과정은 정치적, 국민적 관심을 크게 받고 있으며, 특히 11차 SMA 협상에서 1년 반의 긴 기간이 소요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난항을 나타낸다. 이는 미국의 증액 요구와 한국의 국민 여론 반영이라는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양국 간 입장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정치적 환경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분권화로 특징지어지며, 행정부는 국회의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도자와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대북 정책의 접근 방법

이 달라지며, 이는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접근 방법 차이와 정치적 마찰로 이어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및 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17].

선행 연구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정치구조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했으며, 이 중 유형 4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10]. 이 유형은 분권화된 환경에서 행정부가 국민의 여론에 종속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내정치학 이론과 선행연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으로 정치적 요인을 도출했으며, 관료 정치 시각이론에 입각하여 집권당의 성향을 변수로 설정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적 요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행정적 요인(전년도 분담금예산, 주한미국 병력 수)

행정적 요인은 전년도 방위비 분담금액과 주한미군 병력 수로 측정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이들의 규모는 특별조치협정(SMA) 협상을 통해 산정된다. 이 예산은 국방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협상 방식과 예산의 특성, 지원 내용의 행정적 특성은 방위비 분담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3].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은 총액결정 방식으로, SMA 협상을 통해 첫째의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한 후, 전년도 분담금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이론적 접근으로는 총체주의와 점증주의가 있다. 총체주의는 합리적인 예산액을 통한 최대 효용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협상의 최소화와 국민여론을 고려한 방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론의 실질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18].

반면, 점증주의 이론은 특정 부분의 예산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치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SMA 협상 방식과 총액결정 방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 적합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요인으로서 주한미군의 병력 수도 중요한 변수이다. 이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의 지원 항목이 주한미군의 운용 병력에 따라 예산 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행정적

요인의 분석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18].

5) 국제정치적 요인(중국의 군사력)

국제정치적 요인은 중국의 국방비로 측정하였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과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정치적 요인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은 한미동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주변국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9].

중국의 국력과 군사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자국의 경제 및 군사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9].

이러한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과 미국의 견제 전략은 패권안정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6]. 이에 따라, 중국의 국방예산이 국제정치적 요인의 대표 변수로 선정되었다. 이는 국제정치적 요인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차원이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3. 방위비 분담금(종속변수)

종속변수인 방위비 분담금은 분석기간은 1991년 ~ 2021년까지이다. 국방부와 통계자료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4. 분석모델

분석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며, 독립변수로는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북한도발지수(North Korea's Threat), 집권당 성향(Tendency of the Ruling Party), 전년도 방위비 분담금(Last Year's Defense Cost Sharing), 주한미군 병력 수(USKF's Forces), 그리고 중국의 국방비(China National Defense

Expenditure)이다.

$$\log(Y_t) = \beta_0 + \beta_1 \log(X_{1t}) + \beta_2 X_{2t} + \beta_3 X_{3t} + \beta_4 \log(X_{4t}) + \beta_5 \log(X_{5t}) + \beta_6 \log(X_{6t}) + \epsilon_t$$

- Y_t : 방위비 분담금(KDSC)
- X_{1t} : 한국 국내총생산(KGDP)
- X_{2t} : 북한도발지수(NTHR)
- X_{3t} : 집권당 성향(TRP)
- X_{4t} : 전년도 방위비 분담금(KDSC_{t-1})
- X_{5t} : 주한미군 병력 수(USKFK)
- X_{6t} : 중국의 국방비(CNDE)

그림 2. 다중회귀모형 식
Figure 2. Multiple regression model equations.

IV. 분석결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은 표5와 같다.

표 5.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모형	구분	추정값	SE	t	p	R ²
독립변수	상수항	-5.391	2.735	-1.971	0.061	0.987
	한국 국내총생산(KGDP)	0.888	0.234	3.791	0.001	
	북한도발지수(NTHR)	-0.017	0.015	-1.160	0.258	
	집권당 성향(TRP)	0.033	0.029	1.155	0.260	
	전년도 분담금(KDSC _{t-1})	0.270	0.090	3.003	0.006	
	주한미군 병력수(USKFK)	1.215	0.561	2.165	0.041	
	중국의 국방비(CNDE)	-0.023	0.116	-0.202	0.841	
	종속변수 : 방위비분담금(KDSC _t)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전년도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병력 수가 확인되었다. 결정계수는 0.987로, 이는 종속변수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p-value 값이 0.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의 경제력이 증가함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도 증가한다는 경제적 이론과 일치한다. 한국의 GDP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방위비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한미군 병력 수 역시 방위비 분담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위비 분담 내용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규모는 한국전쟁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현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도 방위비 분담금도 방위비 분담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 점증주의 이론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억제하는 총액결정방식이 협상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8].

한편, 북한도발지수, 집권당의 성향, 중국의 국방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변수들이 방위비 분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거나, 분석 모델에서의 측정 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한미동맹은 1954년 시작 이래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연구는 1991년부터 시작된 한미방위비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했다. 한국의 국력 성장과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SMA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협상 과정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경제, 국제정치, 국내정치, 예산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미방위비 분담금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회귀분석 결과, 우리는 한국의 GDP, 전년도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병력 수가 방위비 분담금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제력의 증가가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예산 점증주의 현상과 SMA

협상 방식이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집권당의 성향, 북한의 군사위협, 중국의 국방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국방비는 군사적 요소만으로 분석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방위비 분담금의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산정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실무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집권당의 성향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협상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제한성과 구체적 대안에 대한 부재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안보 환경의 복잡성을 고려한 다양한 변수의 사용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및 협상 전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References

- [1] MND. 『2020 Defense White Paper』 Seoul : MND, 2020.
- [2] Kwon. H. C. “The Value Estim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2011.
- [3] Lee. 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Korea’s cost sharing for USFK”,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17.
- [4] Defense, M o. N “Defense Cost Sharing”, p.7.
- [5] Ko. S. D. “NATO Defense Cost Sharing study”,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2, 1998.
- [6] Sung. C. K. “A Study on the Theory of Defense and Responsibility Sharing and its Determinant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3, pp.200-201, 1996.
- [7] DTaQ, “Dictionary of defense scientific and technical terms”, 2018.
- [8] Jo. I. H. “A study on the defense cost-sharing : focus on Korea-U.S. alliance and Japan-U.S. allianc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15.
- [9] MND. National defense policy : South Korea-U.S. Security Cooperation [cited 2022 14 June]. Available from : https://www.mnd.go.kr/user/boardList.action?boardId=I_229561&siteId=mnd&id=mnd_010702020000
- [10] Park. H. R.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viding of Defense Expenses in Major U.S. Forces (Korea, Japan, Germany)”, NABO, 2013.
- [11] Baltrusaitis. Daniel F. “Coalition Politics and the Iraq War(Determinants of Choices)”, Firstforum Press, 2010.
- [12] Kim. S. W. “System Polarities and Alliance Politics”, University of Iowa, 2012.
- [13] Jeong. W. y. “An empirical factor analysis and option-pricing-model based validity verification of defense cost sharing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HNU, 2017.
- [14] Lee. Y. C.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U.S. Forces Korea’s Defense Cost Shar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19.
- [15] Kim. D. Y.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ublic Good Characteristics of the ROK-US Alliance”, KNDU, p.38, 2019.
- [16] Lim. J. O. “Analysis of determinants of defense budget Focusing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defense budget in OECD countries and Korea”, 2018.
- [17] Park. H. R. “Analysis of Korea-U.S. Defense Cost Sharing and Tasks(Around theory and case comparison)”, Qua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2014.
- [18] Public Budgeting & Financial Management, 2018.
- [19] Kim. S. H. “Peripheral States’ Position and Response to U.S-China Hegemon Competition”,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titute, 2019.
- [20] Choi. S. B. “A study on the strategic value of the United States forces in South Korea(USFK)”, HYU, 2015.
- [21] Barry Buzan, Ole Weaver and Jaap de Wilde. “Security :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 [22] Bennett, Andrew, Leggold, Joseph and Unger, Danny. “Burden-sharing in the Persian Gulf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48, winter 1994.
- [23] Mancur, Olson Jr and Zeckhauser, Richard. “An Economic Theory of Alliances”, California: The RAND corporation, 1966.
- [24] Oneal, J. and Elord, M. “NATO Burden and the Forces of Change”, International Studies

- Quarterly Vol.33 No.4, 1990.
- [25] Kang. S. Y. "U.S Strategic Trends Outlook for 2021", Korea Institute for Defense, 2020.
- [26] Na. S. H. "A Study on Factors of Change of Korea-US Alliance after the Cold-War", KBU, 2015.
- [27] M. E. SA. "analysis on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 focusing on its asymmetry", KMU, 2014.
- [28] Seol G. S. "China's Rise and the U.S-Japan Alliance(Focusing on mutual recognition, strategies, and issues)",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 2014.
- [29] Shin. K. S.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and the National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R.O.K Joint chiefs of staff, 2019.
- [30] An. Y. R. "A study on the Proper Defense Sharing Level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orea Military Academy, 1998.
- [31] Lee. D. J. "A study on the regional economic impacts of military facilities relocation", KGU, 2018.
- [32] Lee. S. H. "The issue of sharing defense costs between NATO and th ROK-U.S. alliance",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titute, 2019.
- [33] Lee. J. Y. "The New Theory of Large-Country Relations and the New Asian Security Concept(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for 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Nationa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2015.
- [34] Jeon. B. K. "(2021)The Prospect of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Korea's Response Plan",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Investigation Office, 2021.
- [35] Kim. H. S, Park. C. Y. "A Study on North Korea's UAV Threat and Response Stanc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9 No.2, pp. 227-233, March 2023. <http://dx.doi.org/10.17703/JCCT.2023.9.2.227>
- [36] Park. Y. J. "Analyzing the Defense Budgetary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9 No.6, pp. 779-787, November 2023.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779>